

경기

19대 총선 평가와 과제

나형욱 | 신흥대학교 강사

1. 대한민국 축소판 경기도

한국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석 변수는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대결구도와 지역주의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중요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은 이념적 성향보다는 지역주의적 선택에 의해 결정 지워지지 않았는가? 즉, 영남은 여권, 호남은 야권이라는 전통적인 지역주의를 보여주었다.

이번 4.11 총선 역시 지역적 특색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폭정이 민심이반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를 심판할 유권자들은 오히려 새누리당을 과반수의석으로 만들어 주었고, 18대 총선과 보궐선거 등에서 야당을 지지했던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은 새누리당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친노의 고장 부산, 경남에서도 민주통합당은 3석으로 체면만 차렸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서울과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지역주의 성향이 덜 나타났고, 향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중요한 전략지역으로 떠올랐다. 물론 서울·경기도 역시 유권자들의 표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 정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의 정서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 유권자가 보여준 이번 총선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 인구는 1,100만 이상으로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1/4에 해당되며, 한국정치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위상은 서울보다도 크다 할 수 있다. 경기도 인구는 전년에 비해 약 17만 명 늘어난 수치로, 외부유입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에서 전출한 이들의 60.3%가 경기도로 옮겼다고 한다. 결국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다양한 지역에서 유입된 유입인구의 증가,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지역 간 격차 등 경기도만의 독특한 지역주의 정서와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각 정당은 이 지역에서의 총선결과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하여 총력전을 펼쳤다. 그리고 12월 대선과 관련하여 대선후보들은 경기도를 잡지 못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손학규 민주통합당 전 대표는 이 지역을 각각 8차례나 방문하여, 이 지역이 민심이 최대 승부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경기도는 이렇듯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유권자의 정치적 이념과 지역적 배경,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등으로 인해 유권자의 투표경향이 매우 복잡하고 중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 총선 특징 및 평가

이번 총선은 전체적으로 12월 대선 전초전 성격을 지니며, 선거열기 또한 높았다. 첫 선을 보인 국민참여 경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상시 선거운동 도입 등으로 과거 선거보다 유권자의 참여 확대와 젊은 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세대 간 격차를 다소 완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상대후보 및 상대 당에 대한 험뜯기와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 전날까지 극심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북한의 로켓 광명성 3호 발사에 따른 한반도 긴장을

이슈화하며 색깔론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보수와 진보진영의 이념 공방, 불법민간인 사찰과 나꼼수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 등으로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됐고, 유권자도 정책공약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모바일 투표는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 경선과정에서 '돈 선거'의 변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받았다. 민주통합당 당 대표 선거에서 시민의 전폭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지역구 예비후보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이 남겼다. 주소나 성별 확인, 역선택 방지 등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번 경기도 총선과정을 통해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낮은 투표율이다. 전국 투표율이 54.3%인데 반해 경기도 투표율은 52.6%로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대 43.7%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17대 59.7%, 16대 54.9%에 비하면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경기도가 전통적으로 여야 공히 절대적인 전통적 지지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핵심지지층과 경향지지층의 비중이 낮은 반면 부동층이 큰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도 유권자들의 외면은 이번선거에서 야권이 60% 이상의 투표율을 기대했지만, 낮은 투표율은 야권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역공천과정에서 중앙당 시각에서 지역연고가 없는 인사를 낙하산 공천을 하거나 텃밭이란 이유로 후보자를 돌려막기 식으로 결정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반감을 갖게 하였고, 공천에 반발한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표를 결집하지 못했다는 점이 투표율을 낮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보수와 진보의 박빙구도이다. 2년 전 2010년 이명박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한 6.2 지방선거에서 범 보수진영은 45.5%, 범 진보진영은 54.18%의 지지를 받아 지지율 격차가 9% 이상 벌어졌다. 그러나 4.11총선에서 경기도 정당투표 득표율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42.35%, 민주통합당은 37.74%, 통합진보당은 11.01%, 자유선진당은 2.16%로 보수와 진보의 지지율 격차가 4%로 좁혀졌다. 결코 진보세력의 참패나 후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새누리당은 성남과 경기북부 지역에서 당선되었고 이는 전통적으로 보수지지층이 강한 지역이며, 민주통합당은 전체적으로 고루 당선되었다. 지역적 분포에서도 민주통합당은 경기도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셋째,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민주통합당은 경기도에서 선전하였다. 총선이전 18대 국회에서, 여대야소 불리한 선거구도에서 민주통합당과 야권은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MB심판, 언론악법 국정조사, 권력형 비리사건 특검 등 정치적 현안에 여야는 3:1로 싸워야 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모두 140석이 됐으니 최소한 18대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4.11총선 직전 각 정당의 의원수 분포와 이번 총선 결과를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162명에서 152명으로 6% 감소하였고, 민주통합당은 80명에서 127명으로 59% 증가하였고, 통합진보당은 7명에서 13명으로 무려 86% 증가하였다. 의석수에서 보면 이번 총선은 야권이 일방적으로 패배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더욱 그러한 성과가 뚜렷하다. 경기도 전체 의석수 52명중, 새누리당 21명, 민주통합당 29명, 통합진보당 2명이 당선되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보다 8석이나 더 많이 당선되었다. 이는 민주통합당 지지가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8대 당시, 대통령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통합한 통합민주당으로 선거전에 임하여 17명이 당선되었다. 이처럼 18대와 19대 총선결과가 반대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총선 사상 처음 이뤄진

여야의 일대일 구도와 이명박 정권 심판 분위기가 이뤄낸 시너지 효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의석수의 증가 외로, 몇몇 경합지역에서의 가치 있는 승리, 통합진보당의 약진,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 연대의 실험 등은 민주당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초·재선의원으로의 인물쇄신이다. 4·11 총선에서 경기도내 여야 현역의원이 낙선하고 초·재선의원이 과반수를 넘어 정계개편이 이루어졌다. 4·11 총선에서 현역의원 중 새누리당 13명, 민주통합당 3명, 통합진보당 1명 등 모두 17명이 낙선하였다. 이는 전체 의석수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초선 의원은 전체 52명 중 20명으로 38.5%가 정치신인으로 채워졌다. 재선은 13명으로 전체 의석의 25%를 차지해 초·재선 의원의 비율은 63.5%로 과반을 넘었다. 3선 의원은 10명(19.2%), 4선 의원 6명 (11.5%), 5선 의원 3명(5.8%)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의 정치구도에서 새로운 인물과 정책쇄신을 바라는 유권자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은 상대적으로 민주통합당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경기도 지역적 특성에 따른 투표성향이다. 민주통합당은 경기도 인구 60만 이상 도시(수원 107만, 성남 96만, 고양 92만, 부천 86만, 용인 83만, 안산 70만, 안양 61만 순)에서 부천시에서만 4개의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는 후보 개인, 출신 당, 당의 공천 전략, 지역발전 전략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였지만, 이번 선거에서 부천은 지역적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 부천은 경기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이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은 선거기간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선거관련 내용을 공유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 대부분이 서울과 관련한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부천이라는 지역성 보다는 오히려 서울과의 관련성, 그리고 중앙정치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부천의 4개 지역 민주통합당 석권은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 특성을 살려 선거 전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총선 후 과제

4.11 총선은 민주통합당에 몇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민주통합당은 경기도 지역과 관련하여 중앙당 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지역 유권자와 지지자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서민과 중산층의 보호를 위해 정책대안을 내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투표율 제고이다. 제19대 총선거 결과 경기도는 투표율이 저조하였다. 그 이유로는 먼저 부동산표를 흡수하지 못하였고, 투표장으로 유도하지 못하였다. 이는 경기도에 대를 이어 거주해 온 토박이 유권자는 감소해가는 반면, 전국 각지에서 이주해 온 유권자들이 지역 주민이라는 자의식이 약하다 보니 소속감·애향심도 떨어져 총선참여가 저조하였다. 또한 젊은 층에 대한 막연한 야권 지지를 투표장에 이끌지 못했다. 역대 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는 젊은 층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경기도 유권자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경기도 유입 유권자에 대해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들의 욕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며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둘째, 경기도 지역성을 고려하여 중앙당 차원의 권역별 선거전략 수립이다. 크게는 경기도를 서울 인접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의 구분이다. 상당수의 서울 인접지역 경기도 유권자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쇼핑·회식·데이트·문화생활 등 일

상생활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향유해 사실상 '서울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과 관련되어 있어 중앙당 차원에서 정책공약과 전략이 필요하다.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적 이슈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지역 정책 공약을 공유하며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을 능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도의 원칙을 중앙당 차원에서 실천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를 권역별로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선거 전략 수립과정에서부터 경기도를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고 교육·문화적으로도 경기도가 지닌 우수한 역량을 극대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야권단일화에 희망을 갖자. 상징성과 의미로 봐서도 야권이 희망을 가질 만하다. 통합진보당이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에서 민주통합당과 협력을 택할 것이다. 이 두 정당이 앞으로 여러 차원에서 연대를 해나갈 경우 '민주·진보'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새로운 변화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또한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일종의 민주진보연정이 탄생할 가능성도 열어놓게 되었다. 이번 득표율로 보면 민주와 진보를 합친 것이 46.68%로 새누리당 42.77%를 앞선다. 이는 12월 대선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반성도 잊지 말자. 4.11 총선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이 획득한 승리라기보다 야당이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 부조리함과 불공정함의 원흉으로 비난받던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은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은 반면, 민주진보진영은 '심판론'이라는 손쉬운 카드로 몰입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못미친 투표율로 나타났고, 변화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대부분의 선거가 사실상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심판선거의 절정이었다. 심판으로 나타난 분노의 에너지는 순간의 열기는 뜨겁지만 지속되지 않았다. 그 자리를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과 전망으로 채워야 했으나 민주통합당은 이를 채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 이슈의 경우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 ‘무상’만 강조할 뿐 구체적 실행프로그램이 부실하다보니 박근혜식 복지와 차별화되기 어려웠다. 오히려 재원 문제 등에 대해 여당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민주통합당의 당내 개혁이다. 기존 정치구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서울 시장선거에서도 확인하였고, 안철수 교수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통합당내 많은 정파와 계파정치를 깨어야 한다. 이번 총선의 부진 역시 계파 정치가 큰 이유이다. 중요한 정치적 이슈와 현안에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자기 계파나 눈앞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본다. 그리고 예비후보들의 당내경선과, 야권단일후보 경선과정, 전략공천과정에서 탈락 후보들의 불협화음이다. 당내 민주주의 실현이란 차원에서 탈락 후보들은 후보 개인보다는 국가와 당에 대한 대승적 견지에서 탈락이후 더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중앙당은 예비후보 등록과정에서 철저히 이와 같은 예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4. 전망

결과적으로 4.11총선에서 19대 국회는 여대야소로 결정 났다. 민주통합당의 선거 패배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당 지도부, 계파, 예비후보자, 당선자, 당직자 모두는 이번 총선에서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패배의 원인은 민주통합당이 전국적 분포에서의 대표성 부족, 제1당 다수당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18대 총선의 부진한 성적,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압도적 패배를 냉정하게 기억한다면, 이번 총선과정에서 불거진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선전한 것은 국민이 야권의 손을 잡아 주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범야권은 140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민간인 불법사찰, 4대강사업 등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그나마 민주통합당이 약진하였다고 본다. 이 기회에 이번 총선과정에 참여한 경기도 예비후보를 포함한 당선자, 당직자, 운동원, 민주통합당을 지지한 유권자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더욱 낮은 자세로 경기도 지역발전과 당과 국가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 해주길 바란다. 경기도는 서울 수도권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것이며, 12월 대선을 더욱 차분히 준비하고 정책과 아젠다를 통해 지지층을 다시 결집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